

## 토목건설 중심의 수자원정책의 실패사례

이상철(영양댐반대대책위 사무국장)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의 효과를 거론하며 22조원을 들여 4대강사업을 시행했다. 4대강사업이 완료된 지금 더 이상 댐을 지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4대강사업에 대한 어떤 검증과 평가 없이 다시 3조 5천억원을 들여 14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수자원 장기계획에는 매 10년마다 새로운 댐을 지어야하는 규정이 있고 이를 이용하는 토건세력과 자본가들이 국고를 분탕질하는 도구로 전략했기 때문이다. 영양댐의 예에서 문제점과 실패이유를 찾아본다.

### 1. 댐 건설을 위한 수요처 만들기

댐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함이 상식인데 영양댐의 경우는 반대로 댐 건설을 위해 필요한 수요처를 만든 경우로서 처음에는 구미5공단에서 산업용수 공급목적이었으나 용수재처리 등으로 필요 없게 되자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 1년여 동안 해마다가 180Km 떨어진 경산시의 계획 중인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또한 영양군의 인구증가 계획이었던 폐기된 휴타운 사업을 근거로 수요를 부풀리는 등으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 2. 절차와 사전검토의 문제점

군민들이 댐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2011년 3월 29일 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영양댐이 확정되어 4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 된다”는 군수의 발언 이후이다.

이렇듯 밀실담합과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번 없는 비민주적 절차, 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영양군은 매년 100억~300억 원의 농업손실과 전국 11년째 으뜸상을 수상하고 있는 영양군의 주생산품인 고추의 명성 실추, 환경파괴 등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편향된 홍보로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 3. 환경영향평가법에 어긋난 실행계획

2012년 대형토목공사로 인한 환경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하도록 법이 강화되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하여 영양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다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악화로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공식발표 하고 사전검토협의회라는 형식적인 도구를 만들어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 4.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

① 국토부의 원점재검토 약속이행의 첫 단계는 생계형 농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하는 것이다.

② 2013년 사용하지 않은 영양댐 타당성조사예산은 영양댐의 불필요성을 환경부가 밝혔고 국토부는 댐 필요성을 원점에서 논의 중이므로 영양댐 타당성 조사예산은 이월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 영양댐 백지화 공동대책 위원회 -